

## 한반도 분단 70년, 미래 30년

윤영관 / 서울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냉전과 탈냉전

한반도의 분단 70년이 지나가고 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걸쳐있는 작은 반도 이면서 세계 최강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은 순탄치 못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밀려들어오던 제국주의 세력들을 자력으로 물리쳐내지 못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꼬인 역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분단으로 연결되었다. 2차 대전 승전국,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설정한 임시 경계선 38선이 한국전쟁을 거쳐 휴전선으로, 국경 아닌 국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1990년을 전후해 냉전 국제질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유일하게 한반도에 서만 냉전 대결구도가 끄떡없이 지속되고 있다.

냉전기 45년(1945~90) 동안 한반도는 국제질서에서 작동하는 냉전 동력에 압도되어 분단 고착화의 길을 걸었다. 무엇보다 국제 냉전 심화의 획을 그었던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은 한민족의 모든 삶의 영역과 정신사적 측면에서 왜곡을 심화시켰다. 다행히 남쪽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바라보는 도약이 있었고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로의 정치발전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통제경제 속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되었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북한경제는 197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남한경제에 뒤지기 시작했고 그 후 남북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졌다. 한편 1970년대 초반에는 닉슨-키신저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된 미중 화해 과정의 영향을 받아 7·4공동성명과 같은 최초의 남북 대화 시도가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한반도 상황은 1990~91년을 기점으로 탈냉전 국제질서가 시작되면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동구권 공산 정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1990), 그리고 구소련 붕괴(1991년)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구소련으로부터 들어오던

원유 수입 가격이 4배로 뛰면서 북한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북한 경제의 마비, 더 나아가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기근은 북한경제에 대한 당국의 사회주의적 통제력의 약화를 낳았고 시장기제의 자생적 발달을 초래했다. 그 후 2009년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기제의 확산과 심화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북한 당국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재래식 군사력 격차, 외교적 고립과 체제 불안 속에서 핵개발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는 선택이었지만 이를 막기 위한 20여년의 서방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은 핵무장에 성공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초의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대세에 발맞추어 한반도 탈냉전을 꿈꾸며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로 계승되었고 그 결과 남북 간에는 상당 정도의 협력과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장해왔던 통일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분단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듯 보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북한의 2차 핵실험(2009)과 천안함, 연평도 공격(2010)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분단 현실의 반성과 극복의 비전

분단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보니 이제 이러한 분단속의 삶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한국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현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신사적 측면이다.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아무리 한국이 경제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되었다 해도 같은 피를 나누는 민족이 휴전선 너머 저편에서 굶주리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남의 일처럼

행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정상 국가’로 보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아무리 물질주의가 횡행하는 세계화 시대라 해도 어떤 형태로든 ‘민족’은 있는 것이다. 설령 ‘민족’이 아니고 ‘국민’이나 ‘국가’라는 좀 더 개방적 단위에 천착하더라도 그것의 격(格)이 있는 것이다. 잠시 잃어버린 ‘얼’과 ‘격’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분단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의식의 측면이다. 지금 내배가 좀 부르다고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그리고 그 아들딸의 아들딸들이 우리보다 떳떳하게 잘살 수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제대로 된 부모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의식이란 별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부모들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은 무슨 통일” 이냐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그러한 부모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세태가 바로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되찾아야 할 때다.

셋째, 국제정치의 측면이다. 우리의 북쪽과 서쪽의 대륙 세력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연합하여 대륙을 압박하는 고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을 칠 테니 길을 비켜 달라(證明假道)’고 하지 않았던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중국(1894~95)과 러시아(1904~05)는 일본에게 큰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우리의 동쪽 바다 건너에 있는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대륙과 연합하여 해양 세력을 적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전쟁(1950)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어 해주었던 미국에게도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러다보니 주변 4국들은 가능하다면 한반도의 현상 유지, 즉 분단을 원한다. 한반도 분단 극복보다는 분단 관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주변국 권력게임에 장단을 맞추는 종속변수로 만족할 것인가?

넷째, 국내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이다. 분단 지속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이 국제 냉전 대결의 첨병 역할을 해오다보니 국내정치는 과대하게 이념화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25년 전 냉전 국제질서가 끝나버렸는데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념 대결이 한창이다. 선진 국제사회 흐름의 보편적 기준과도

동떨어진 보수·진보, 좌·우의 대결 속에서 열려있는 실용주의와 실리주의는 설 자리를 잃고 경직적이고 소모적인 정치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당연시될 정도의 ‘평등’이나 ‘복지’ 개념마저,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 속에서 제대로 추구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한국사회는 양극화되고 실용적 협력을 통한 공동선의 추구보다 ‘너 죽고 나 살기’ 식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직된 이념의 대결 속에 문화적 창발성이 억눌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삭막하기만 하다. 분단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 도처에 한국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분단 극복은 한국경제에 탈출구를 마련해 제2의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을 정치적 영토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능적·실질적 통일, 즉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북한과 경제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북한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출구가 열리고 본격적인 북방 경제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미래 30년 - 분단 극복의 길

그렇다면 분단 극복의 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구해야할 것인가? 그 핵심은 경제다. 대륙과 해양 세력 중간에 걸쳐있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지정학적(地經學的) 접근 속에 있다. 돈의 힘은 핵의 위력보다 강하다.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이란이 서방과의 핵협상에 나서서 타협을 모색한 것도 결국 경제제재를 풀고 세계경제와의 연결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 외교와 제재라는 압박만을 통한 북한 핵개발 억제가 그렇게도 힘든 것은 북한경제가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제재 자체가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제재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13년 초반 북한의 강한 도발이 있었을 때 북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가 먼저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경제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아직도 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의 힘’은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분단 극복과 통일의 비전이 있다면 대북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 동안의 지정학적 접근에서 끝나지 말고 지정학적 접근을 과감하게 추구해야 한다. 시장 원리의 대전제 하에 남북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들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침 북한 당국은 경제 발전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경제는 1980년대 후반 소련이 추구했던 분산적 사회주의와 유사한 단계에 와있다. 거기에 중국식의 경제특구 발전 방식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방의 정치적 영향을 우려해 중심부 평양에서 거리가 먼 주변에만 개설하던 경제특구를 이제 평양 가까이까지 확대해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내부적으로는 ‘돈주’들이 신흥 자본가 역할을 하면서 북한경제 변화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의 연결고리를 심화시켜야 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의료, 환경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 핵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들을 끌어내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했던 2012년 2.29합의와 유사한 모델을 한국정부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냄으로써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2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2년여 세월이 과거 2년 반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잃어버린 5년’이 되어버릴 것이다.

분단 극복, 또는 통일이란 앞에서 설명한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원심력보다 더욱 강한 남북한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키워내는 일이다. 그러한 구심력이 키워 지지도 않았는데 정치 제도적, 영토적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통일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가 약한 토대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한 남북간 통합의 구심력 강화의 핵심이 경제인 것이다. 70년을 지탱해 온 국제 냉전질서가 무너진 것은 핵 때문이 아니라 고르바초프가 잠자던 구소련의 ‘경제’를 발동시켰기 때문이다. 아마도 70년을 지탱해 온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도 핵이 아니라 ‘경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統**